

에너지 산업 특성 살려 공공기관 최다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형 일자리 9012개 창출... 지자체-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신산업 사업화·글로벌 시장 진출로 2022년까지 1만여 일자리 기대



김종갑 사장

2016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이며, 특히 청년층(15~29세)과 정년층(50세 이상)이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저임금·고용불안 등 열악한 고용상황이 지속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오는 2020년까지 20.5만명을 목표로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를 도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일자리창출 위해 팔 걷어 붙인다=이에 따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도 공공부문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속적인 신사업과 해외사업 추진, 탄산수에 높은 고용창출 연계효과를 내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과 CEO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다.

우선 한전은 전사적인 역량을 총 결집해 일자리 창출 추진 체계 구축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민·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5월 'KEPCO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장을 위원장으로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정규직화와 관련된 본사 차·실장 22명을 위원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 3개 분과 55명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구성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방안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돼 운영 중이다.

앞서 한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했다. 2017년 12월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용전 점검,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비정규직 직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234명을 신규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통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또 점검, 청소시설 및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했다. 이해 당사자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회사 방식의 전환협의의 도출하고, 전환에 필요한 정부승인과 최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민간일자리 확산 정책에 동참해

에너지 신산업 SPC 설립, 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본업과 연계한 일자리 직접 창출 1015개와 국내 설비투자, 중소기업 지원(금융, R&D 등)을 통한 고용유발 등 간접적 일자리 창출 2만2172개를 달성하기도 했다.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상생형 일자리 9012개를 창출했고, 지자체, 대학·고등학교 등과 연계해 458명의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에너지밸리를 비롯한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사회경제적 지원과 취약계층 취·창업지원으로 998개의 일자리 안정망을 확충해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이다.

◇청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까지=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계획으로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1786명을 공개채용했고, 올해도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전문인력(대학, 학점연계), 우수 기능인력(고교) 양성 및 채용박람회 확대 등으로 '지역맞춤형 인재확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여성 등) 대상 채용우대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신산업을 조기에 사업화를 추진해 미래에 유망한 민간 일자리를 개척하고, 한전과 민간이 협력하는 K-SEM(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설비 제조·시공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수립부터 수출·컨설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육성·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오는 2022년까지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로 일자리 창출 시너지도 극대화한다. UAE 원전건설·운영 사업을 기반으로

해외 대규모 민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가고, 일본 및 미국 태양광 발전소 등의 글로벌 신재생 사업 신규 수주를 통해 국내 기자재 제조·납품업체 등의 동반진출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한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촉진브랜드 KTP를 운영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사무소 역할을 수행해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글로벌 대규모 전력 비즈니스의 장인 빅스포(BIXPO)를 통해 국산 기자재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수출계약을 지원해 국내의 판로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전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과 창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와 중기재단 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에 협약을 체결해 1개월의 전기기능사 양성과정을 신설했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배전 기능자력 취업 설명회'를 개최해 우량 전기공사업체에 취업을 앞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려인, 청소년 재소자 등 관할 기관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도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공부문,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더불어 탄산수에 높은 고용창출 연계효과를 내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지난해 '빅스포 2018'(BIXPO) 행사장에서 동시에 열린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 등을 받고 있다. 한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비롯한 청년인턴 운영 강화와 전문·기능인력 양성 및 채용박람회, 취업취약계층 채용 우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 한전이 지난해 중동에서 개최한 수출촉진회 현장 모습. <아래>



도민과 함께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공기업!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20~40대 젊은 직원들이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다. 한전은 공공부문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